

“출발은 빠른데 도착은 더 늦어”...이용객 불만

호남선 KTX 10년 만의 증편 첫날



광주송정~용산 KTX 4편 중 상·하행 1편씩 증편

서대전 경유로 18분 지연...실질적 확대 편성 시급

호남선 KTX가 10년 만에 증편됐지만 정차 이용객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적이다. 기존 열차보다 일찍 출발함에도 도착 시간이 더 늦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증편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17일 오전 5시30분, 광주송정역에는 이른 시간에도 서울행 KTX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볐다. 이날부터 운행에 들어간 오전 5시52분 증편 열차도 이미 매진된 상태였

다. 그러나 승객들은 “증편 덕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예매 전쟁만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기존 용산~익산 운행 KTX 산천 열차 4편 중 상·하행 각 1편씩(총 2편)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했다. 상행선은 기존 오전 6시25분 익산 출발 열차가 오전 5시52분 광주송정발로 바뀌었고, 하행선은 오후 9시 9분 용산 출발 열차의 종착역이 익산

에서 광주송정(오후 11시44분)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새로 생긴 열차가 기존 열차보다 더 늦게 도착한다는 점이다.

기존 오전 6시1분 광주송정발 KTX는 오전 8시13분 용산에 도착하지만, 증편된 오전 5시52분 열차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탓에 오전 8시31분에 도착한다. 출발은 9분 빠르는데 도착은 18분 늦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열차(474열차)는 익산·장성 등을 지나는 일반선 경우로 고속선(404열차) 대비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산~익산’ 기존 노선을 단순 연장한 방식이 오히려 도착 지연을 초래했고, 실질적인 증편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장을 위해 KTX를 자주 이용한다는

정하영씨(34)는 “새 열차가 생겼다길래 선택권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결국 기존 시간대 표만 더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며 “원하는 시간은 한 달 전부터 예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톡 기준 가장 수요가 높은 월요일 오전 6시1분 KTX 특·우등석은 12월15일까지 전부 매진된 상태였다.

또다른 이용객 김모씨(59)는 “호남선은 경부선보다 열차 운행이 절반 수준인데, 새로 넣은 열차가 더 느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서울 직행 열차와 KTX-1 같은 대형 편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몰리는 주말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요일 아침 상행과 일요일 오후 하행은 대부분 매진됐고, 증편된 하행선(용산 21:09→광주송정 23:44) 도 도착

이 자정에 가까워 ‘비수요 시간대 증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송정역을 포함한 호남권은 피크 시간대(주중·주말) 운행이 각 13회로 경부선(주중 27회·주말 31회)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좌석 또한 경부선에는 955석의 KTX-1이 투입되는 반면 호남선은 379석 KTX-산천이 주력여서 구조적 좌석난이 고착되고 있다.

한편 호남선은 지난 2005년 분기점이 오송으로 확정된 뒤 시간·요금에서 불리함을 겪어 왔으며, 경부선보다 11년 늦은 2015년에야 개통되면서 ‘지역 차별 논란’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예보	07:10	달출	05:10
해일	17:25	달입	15:57



광주	구름	3~9
목포	구름	5~10
여수	구름	4~9
순천	구름	2~8
구례	구름	1~8
광주	구름	4~10
전남	구름	5~11
전남	구름	7~12
전남	구름	1~11
전남	구름	6~11

목포	미물(고)	00:35 / 13:14
여수	미물(저)	05:58 / 18:33
여수	미물(고)	08:02 / 19:53
여수	미물(저)	01:25 / 14:00

제주 임산부 헬기로 광주행

미세먼지 확산하세요!
제주도 신생아 병상 만실로 인해 조산 가능성이 있는 쌍둥이 임산부가 소방헬기를 타고 광주 한 병원으로 이송.

17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께 제주도에 거주하는 26주차 쌍둥이 임산부 A씨(29)가 조산 가능성이 있어 다른 지역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

신고 당시 제주도 유일 신생아 병동인 제주대병원 집중치료실이 모두 차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A씨를 수용할 병원이 마땅치 않자 소방당국은 A씨를 헬기에 태운 뒤 육지인 광주로 급하게 이송.

다행히 A씨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 도착했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소방 관계자는 “임산부의 조산 위험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상황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약 대량 유통’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체포

전남경찰, 총책 등 58명 송치...15억8000만원 상당 압수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두동록 차량(대포차)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 58명이 무다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마약류를 국내로 들고,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총책 A씨(41) 등 49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아바,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마약을 유통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형태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유통책과 투약자 57명은 라오스 국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태국 국적이다. 이 중 51명이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9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9억4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82.7g을 압수했다. 또 5억9000만원 상당의 아바 1만1782정과 5100만원 상당의 대마 512.8g 등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경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체류 외국인 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중간 판매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광주와 전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해외 마약류 공급원은 국제공조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백댄서 논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사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전국노래자랑 출연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 공무원의 ‘백댄서’ 참여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문 청장은 17일 행정전산망 ‘새울’ 내부 게시판에 “한없이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문 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자존심을 구경장인 제가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으로 주말 내내 괴로웠다”며 “누구보다 주민을 위해 헌신하면서 일해온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이 사려 깊지 못한 저의 부족함으로 의

부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고백했다.

문 구청장은 “4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제가 바라본 공직의 나침반은 항상 주민 삶의 질 향상이었다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동료 공직자”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초심을 다시 살피겠다.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해오신 일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했던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51·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송 고검장은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노 전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거다. 법조계에선 고검장들이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노 전 권한대행 사퇴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박현철 광주지검장과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서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마을활동가, 주민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기념재단, ‘北 개입 칼럼’ 작성자 2명 고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필진...허위사실 유포 혐의

5·18기념재단이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5·18기념재단은 이들을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중 김모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김O산의 울림’ 칼럼에서 지난해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

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모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명예교수다. 그는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조O기의 언론 톨아보기’ 칼럼에서 지난 2023년 10월4일부터 지난해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기념재단은 이들의 칼럼이 허기자가 작성한 ‘단독: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소개하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을 규정한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락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크게 어긋난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5·18부상자회, 신임 회장 선출 놓고 또다시 ‘내홍’

구성원 미달·절차 위반...일부 회원들 위법성 주장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신청 예고...법정 공방 불가피

민주화를 위해 군의 총칼에 맞섰던 5·18의 주역들이 정작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운영을 두고 양분돼 서로에게 창끝을 겨누고 있다.

신임 회장 선출을 두고 일부 회원들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법원 가처분신청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내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2025년 임시 중앙총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감사 불신임의

건, 이사회 안건 무효의 건, 대의원 수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정관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단독 후보로 나선 신극정 후보의 회장 임명이었다.

정관상 단독 출마자는 별도 표결 없이 자동 추대되는 만큼, 신 후보는 이날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이후 신 회장은 5·18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3·1운동, 4·19혁명, 5·18민주

정신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 이념의 역사적 계승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총회 과정 전반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임시총회 소집을 비롯해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조규연 전임 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총회 무효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행의 소용’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조 회장은 “전체 구성원 153명 중 대의원 77명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지만, 실제 참석자는 30여명에 불과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나머지 참석자 중 일부 부상자 회원을 대의원으로 간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회장 선거와 관련해 조 전 회장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새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에서 당선 무효가 판결된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극정 신임 회장 측은 “모든 절차는 정관에 따라 진행했다”며 위법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신 회장은 “총회 투표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했고, 실제 대의원 참석 인원은 85명”이라며 “서면 동의 9명을 포함하면 총 94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회 운영은 법조인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진행했다”며 조 전 회장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